

2018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4. part2 제 96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정부는 분권 · 지방은 독립 .. ‘자립형 경제블록’ 완성해야 3
2. 작년 걷힌 67 조 부가가치세중 지방소비세로 11% 떼내 배분 , 세율 최대 21% 상향 추진 5
3. 행안부 , 자치분권 . 균형발전 강좌 개설6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 국토 균형발전 모색 ... 정책 역량 결집 " 7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정법에 묶인 강화 · 옹진 규제완화 시장 후보들 생각은 ? 10
2. 김성원 , "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적 지원 우선돼야 " 11

1. 정부는 분권 · 지방은 독립 .. '자립형 경제블록' 완성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파이낸셜뉴스

02

주요내용

■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시급

- 지난 20 년간 재원과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중앙집권화는 계속해서 강화, 서울공화국이 한층 공고화되는 모양새
 - 권력이 바뀔 때마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들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이유는 제대로 된 지역발전 정책이 없기 때문

■ 지역산업, 지역에서 스스로 찾아야

- 현재 지역발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정치권의 영향 등에 따라 예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기능이 없어 지방 자원과 역량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 또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자 위주 사업추진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쟁, 낭비 심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
 - 중앙에서는 부처와 부처, 중앙과 지방 사이인 부처와 지자체, 지자체 간 연계도 미흡
 - 그 결과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중앙부처의 총괄 조정 및 모니터링·컨설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
-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음
 - 예컨대 충북 바이오, 광주 광산업, 강원 의료기기 등 지역전략산업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에 힘입어 기업 집적 등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생적 산업생태계로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이들 지역산업은 허브 역할을 하는 선도기업의 부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지역산업 전체의 스케일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클러스터로서 지속성장의 관건인 창업·스핀오프 활동은 기대에 미달
- 이에 지역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찾고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과 사업을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
-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 지역산업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할과 참여가 중요
 -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무를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지방분권으로 신성장동력 찾자

- 1995 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등장
-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에 대해 지역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분권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에 대한 불만, 중복적인 규제, 부처할거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으며 정부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투자 의사결정 등에 지장이 많은 게 현실
- 이에 지방분권을 통해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 재원도 내려야 한다는 것
-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
 - 중앙정부는 캐치가 안되고 지역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짜야 함

1. 정부는 분권 · 지방은 독립 .. '자립형 경제블록' 완성해야

02

주요내용

- 지방이 스스로 먹거리를 치열하게 고민

■ 지자체, 권한 가져와 지역산업 '활기'

- 권한 있는 중앙정부는 지역 실정을 알지 못해 활용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권한이 없는 지방은 이 자산을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의지나 역량이 없음
- 지역자산의 미활용성이 높다는 지적
- 지방 분권을 통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실제 지방 주도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성과를 낸 사례
 - 부산의 항만이 과거 북항에서 신항으로 옮김
 - 신항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노후한 북항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창고로 전락
 - 중앙정부에서는 항만법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음
 - 이에 부산시에서 직접 나서 2016년 11월 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이를 통해 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했을 때 북항 A 부두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9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 8000명으로 추산
- 도시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지난 2009년 시·도로 내려온 데 이어 2014년에는 시·군·구로 이양
 - 이에 여주, 이천, 성남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아울렛을 허가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
-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이 권한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평가
 -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려면 기존에는 8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계획 수립기간이 2년으로 단축
- 정현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산이 큰 의미가 없다며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안 줘서 손을 못댄다. 인력, 자산이 다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 중앙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획일적이고 행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지방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생각
 - 지방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쓰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분권을 통해 국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2. 작년 걸린 67 조 부가가치세중 지방소비세로 11% 떼내 배분, 세율 최대 21% 상향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앞으로 중앙정부가 국세로 걸어서 지방에 일부를 내려주던 `지방소비세` 세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

- 22 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 (TF) 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연간 최대 7 조원가량의 세금이 지방에 더 배분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지방소비세란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물건값의 10%) 를 걷은 후 부가가치세의 11% 를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으로, 도세 (광역자치단체) 의 일종
- 해당 분야에 정통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
 -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소비세가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음
 - 국회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얼마나 세율을 올릴지를 검토 중
- TF 의 또 다른 축인 기획재정부
 - 아직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 같은 논의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함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엔 현행 세율 (부가가치세의 11%) 을 각각 16%, 20%, 21% 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음
 -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67 조 1000 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3 조 4000 억원, 6 조원, 6 조 7000 억원
-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16 년 기준 76 대 24 인데, 지방소비세가 20% 까지 올라가면 비중은 74 대 26 으로 내려감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 까지 낮춰 지방세 증대를 통한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방소비세율 증가는 광역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아 지방 자립도를 상승
- 아울러 재정분권 TF 는 추가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 세수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편중` 을 막기 위해 균형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
 - 가령 현재도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 3 개 시도에는 1,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2, 비수도권에 도의 경우 3 으로 가중치를 달리해 `수도권 편중 현상` 을 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확대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균형 장치를 두겠다는 것
- 이상훈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 지방소비세의 배분 과정도 균형 기능이 필요한데 현재 11% 중 5% 는 부가가치세 기준인 소비지수, 그리고 6% 는 취득세 감면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보니 지역별로 취득세 감소 규모를 추정해 나눠주고 있음
 - 지방소비세율이 상승할 경우 기준 역시 원래 부가가치세 취지와 맞는 `소비지수` 로 단일화해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

3. 행안부, 자치분권 . 균형발전 강좌 개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토일보

02

주요내용

■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이 개설, 25일부터 3일간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하 자치인재원) 은 중앙·지방 공무원 80 여명이 참여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 을 신설·운영한다고 24일 밝힘
 -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과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 을 중점 추진 중
- 특히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 자치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주민들과 더욱 밀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
-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은 2018년 두 번째 시책교육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 을 신설
 - 이번 과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신윤창 위원 (강원대 교수) 의 특강과 함께 행안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특강이 포함돼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과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 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참여로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
- 지자체 차원의 정책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
 - 서울 성북구청장은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협치를 추구하는 성북형 마을민주주의를 소개
 -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사업부서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례를 소개할 계획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 국토 균형발전 모색 ... 정책 역량 결집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3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토일보

02

주요내용

■ 국토 균형 발전 모색 ... 정책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이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
-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인터뷰
 - 도심 쇠퇴,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지고 있음
 - 여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안전정책 등을 펼치고 있음
 - 그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

▶ 관교 제 2TV, 도시첨단산단 육성 ... 지역 특성 맞게 전국 확산 추진, 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 구조 안전 강화 검토

- 올해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
- 이를 통해 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로 국토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를' 도시혁신 플랫폼 '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살린 특화모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목표를 언급
- 이밖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構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화재 안전관리를 펼쳐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임을 시사

▶ 유병권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 일답

-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한다면
 - 균형발전은 국토도시실의 핵심적인 업무로, 지금까지 지속 추진, 앞으로 자치 분권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
 - 먼저 올해부터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도입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방침
 - 무엇보다도 지역 중심으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준비
 - 혁신도시, 세종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지역의 혁신거점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력제고를 도모할 계획
 -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은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기존 정책과 접목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정책을 마련 중
 - 새만금사업은 개발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에 착수하여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추진
 - 판교 제 2 테크노밸리를 창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의 대표모델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구상
 - 이밖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지역 수요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 국토 균형발전 모색 ... 정책 역량 결집 "

02

주요내용

- 도시재생로드맵의 향후 추진 방향은.
 - 국토부는 쇠퇴 구도심지역이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다양한 혁신 거점을 2022년까지 전국 250 곳에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에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기대
 - 이는 지난달 27 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
 - 구체적으로 보면, 복합기능을 갖춘 혁신공간은 150 곳이 마련
 - 구도심 내 첨단산업과 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청년 창업공간, 청년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복합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가칭)' 도 총 100 곳 이상 조성
 - 혁신공간은 청년을 위한 시세 절반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 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대학타운형, 역사·문화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총 100 곳 이상의 지역에서 맞춤형 특화 재생을 추진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산업 정책이 있다면
 -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 위주의 산업입지정책은 국내 제조업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첨단산업 및 기술창업 육성 기능은 다소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
 - 지식·정보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업종 간 융·복합 등이 중심이 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입지 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산업입지 공급이 중요
 - 국토부는 지난해 12 월 발표한 '판교 제 2 벨리 활성화방안' 에 따라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새로운 시도
 - 저렴한 업무 공간과 창업 컨설팅 등을 한데 집약시켜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
 - 콘퍼런스·전시·공연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고, 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주거·여가공간을 충분히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판교형 선도모델은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
 - 공공기관이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센터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급
 - 이밖에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유형 발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기술 개발, 산업단지 지원체계 정비 방안 등도 계속 고민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 시범도시는 입지 현황과 기본적인 개념 (Concept) 만 간략하게 발표된 상황, 연내 기본구상안 (content) 마련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
 - 이를 위해 마스터플래너와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구상안을 마련하고, 4 차산업위·스마트시티 특위를 통해 유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
 - 특히 특위 내 전문가 6~7 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 서비스 소그룹을 구성, 사업지별 기본구상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
 -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마련한 이후 내년 중 실시설계 수립,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국토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
 - 국가 시범도시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 도시문제 해결,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
 - 테스트 베드는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4 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미래기술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
 -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로 단절된 도시데이터를 연계·개방해, 교통·에너지 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유도
 -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시에 구현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임
- 2020 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인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난 17 일 국무회의 보고를 완료
 - 공원 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의 50% 를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 국토 균형발전 모색 ... 정책 역량 결집 "

02

주요내용

- 5 년간 지원할 계획
 -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조성을 지원하고, 임차공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 준비를 병행할 예정
 - 실효가 불거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주민이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
 - 앞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
- **지진·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 국토부는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사람 중심 제도 개선사항을 민·관·학 합동으로 적극 발굴 중
 -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1962년 제정 시부터 일반적인 기준을 도입해 시행 중, 국내외 화재사고, 해외 선진 기준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음
 - 다만 건축물 규모, 높이 중심의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재실자의 밀도 또는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된 필로티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필로티 천정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
 - 건축물 내진기준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의무설계 대상을 확대
 - 지난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음
 - 특히 건축물 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해 국민이 안전한 건축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참고로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취약 건축물 DB 구축, 보강 우선순위 도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마련' 정책연구도 시행
 - 아울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달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됨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부실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

1. 수정법에 묶인 강화 · 옹진 규제완화 시장 후보들 생각은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2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기호일보

02

주요내용

■ 6·13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다른 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 남동갑)**
 - 단적으로 서울 ~ 강원 (직선 180 km) 거리보다 서울 ~ 옹진 백령도 (직선 210 km) 거리가 더 멀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더구나 접경지역으로 오히려 군사적 · 행정적 제약까지 받고 있음
 - 균형발전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
 - 강화 · 옹진 지역 발전을 위해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 연도교 · 연륙교 추가 건설과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함
 - 또 이들 도서지역을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 섬 ·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문재인 정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것임
- **자유한국당 유정복 현 인천시장**
 - 강화 · 옹진은 인천지역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인천 ~ 개성공단 ~ 해주를 잇는 서해협력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지역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대통령비서실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우리 국토와 섬의 가치 재발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서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해소하는 마을 생활환경을 집중 개선해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야 함
 - 관광 분야는 섬 특수성이 반영된 기반시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관광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을 육성
- **김응호 위원장**
 -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함
 - 강화와 옹진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차원으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접경지역인 이곳은 평화를 테마로 발전 방향을 내놓아야 함
 - 이를 위해 영종 ~ 강화 간 도로 건설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강화군 교동 일대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것
 - 옹진군의 경우 어장 확대와 남북 수산물 해상파시 추진, 북의 강령 농수산물가공단지과 연계한 남북 수산물가공센터 건립과 한강 하구에 대한 남북 협력을 구축해 서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것

2. 김성원, "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적 지원 우선돼야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4.2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 (동두천·연천) 은 25 일 “남북 평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고 밝힘

•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

-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재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근본적으로 폐기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시점, 선부른 퍼주기 준비는 지양
-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먼저
-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 접경지역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경제발전은 커녕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도시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 그는 파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규제에 묶여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분당, 성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고 밝혔음

- 남부에 위치한 대기업이 192 개에 달하는데 비해 북부에는 고작 13 개이고, 종합병원도 남부가 북부보다 2 배 이상 많으며, 예산도 남부가 북부보다 약 3.5 배 더 많음
- 일자리가 부족하니 당연히 인구도 남부 지역이 3 배 가까이 많다고 설명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을 추진하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

• 북한의 개성이 아닌 남한지역에 제 2 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음